

# 2022년까지 재난안전기술 2조3239억 투자

### 정부, '제3차 기술개발 종합계획' 발표... 미래·신종 재난대비 기술 선진화... 선진국 대비 80% 상향

정부가 재난·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등 미래 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 2조3239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SMART 기술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3차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를 위해 2조3239억원을 투자한다.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76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재난피해자 지원 서비스·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6489억원이 투자된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방한한 이방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담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은 25일 오후 8시에 열렸다.

실용화지원 기술,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 등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이 약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지원한다.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총 3조7418억 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기준)이 투자된다. 이는 제2차 종합계획(2조1526억원) 대비 73.8%(1조58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

난안전기술은 선진국 대비 80%(2016년 기준 73.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차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활용 신기술 개발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 2차 종합계획으로 재난안전 분야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대비 2008년 54%에서 2013년 73%로 향상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재난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람 중심 과학기술... 4차산업혁명 지향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지난 23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밝음과 여유,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전략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이기를 바란다"며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형성해 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수립 60주년이었던 2008년에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60년 동안의 성취 중 가장 자랑스러운 점'을 묻는 조사에 대한 응답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소개했다.

이 총리는 "가장 놀라게도 가장 많은 응답은 과학기술의 발달이었다"며 "올림픽의 해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1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각 개인의 삶을 중요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정부 수립 이후 60년 동안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삶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범 사용된 것을 언급하며 "ICT 강국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에 멋지게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CNN을 포함한 외신도 평창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진입한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만의 혁명은 아니다"며 "인류의 삶과 사회의 전개에 광범한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네이버 수사·경제민주화 촉구' 靑 국민청원 20만 넘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청원도 20만 돌파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1만2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美 통상압력 WTO 제소... GM, 3대 원칙 지켜야"

#### 당정, 국회서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 열어...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단호히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훈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 양국 간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대미 수출 등 대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M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충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뉴시스

### 김석철 전 국회의장 정부비서관

###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김석철 전 국회의장 정부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21일 공식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최고결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석철 정책위 부의장 임명을 인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 서열 3위의 중요 집행기구로 집권여당의 정책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각 행정부에 전달,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새롭게 주어진 정책위 부의장의 역할에 걸맞게 정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고향 발전을 견인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침체된 정읍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 중앙당에 제안, 정책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호남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KBS기자, 민주당 정읍지구당 사무국장, 제17대 국회의장 정부비서관(3급),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월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